

“세월호 유족·생존학생 무차별 사찰했다”

軍 특별수사단,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과 생존학생 등에 대해 무분별한 사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TF가 불법 수집한 정보는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에게 보고돼 국면 전환을 피하는데 활용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수상시키지는 제인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특수단은 기무사와 보안연구소 등 총 8회에 걸쳐 21곳 3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 기무사 간부와 요원 등 총 110여명을 129차례 소환조사했다. TF 요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약 60여만 개, 700GB 용량의 파일을 분석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관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중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중장) 전 유병연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 지지를 회복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 개별 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주외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하고,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

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또 광주·전남지역 610부대장이었던 소 소장(당시 대령)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지시했다. 사찰행위가 유가족 등에게 발각될 경우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려고 하는 등 활동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 개인의 성향(강성, 중도),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다.

경기지역 310부대장이었던 김 준장(당시 대령)도 각 부대원에게 단원과 가 있는 안산에서 유가족 및 생존학생의 동정을 파악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 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인 '정보OO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종교거레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등 사이버 사찰도 병행했다.

세월호 정국 전환을 위해 전 부대원에게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사건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지만, 인양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참사 두 달 뒤에는 수장 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지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월호TF는 당시 정국 조기전환 방안으로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구 조사를 벌여 신원 확인 후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 협상할 필요', '정부는 지속 수색을 하겠다'는 표면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朴정부 당시 국면 전환용... 희생자 수장 방안 등靑에 제언 박근혜靑 '최고의 부대' 찬사...장성 2명 구속 등 5명 기소

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함', '세월호 선주·선장의 악행을 부각하여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대상 유도(악인·악인 여론형성)' 등을 제시했다고 군 특수단은 전했다. 기무사는 2014년 6월11일부터 유병연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해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2000여건,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1300여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

이 TF는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 보고 건에 대해 "기무사민권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는 청와대 독려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연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감청의 위법성을 제기한 실무자 보고서도 적법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대간첩 방탐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전과환경조사'로 위장 감청하기도 했다.

군 특수단은 "보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유병연 은신 의심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전개한 후 유병연 관련 통신 파악을 위해 공공

관을 수행하기로 했다. 군복을 벗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기로 했다.

수사를 총괄한 전익수 단장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기능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이날 2019년도 실국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회를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김진성 기자

예산 심의·행감 대비 도의회 상임위 의원 연찬회

문건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6일 문건위 회의실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 실·국장의 예산(안)을 청취하고 의원들 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환복위 제358회 정례회 시작에 앞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가 6일 의회 내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환복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원들간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2019년도 실국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회를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김진성 기자

JSA 자유왕래 허용 합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새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하고, 관광객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는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참가했다.

3자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유엔사는 지난달 26~27일 진행된 JSA 비무장화 3차 공동검증결과를 평가하고, 양측 진입로에 새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플랫폼에 우리측 비무장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C초소)에는 북측 비무장 초소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3자 협의체는 JSA내 상대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

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은 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경비병력이 권총을 휴대하지 않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차고 근무하고 있지만, MDL(군사분계선)을 훨씬하지 않고 각자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또 3자 협의체는 JSA내 감시장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장비 조정과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들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JSA내 관광객들의 자유왕래 보장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JSA 비무장화 조치 후 관광객들과 참관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민간 참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왕래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9·19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 중임을 상호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앞으로 JSA 비무장화를 통해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靑 "8일 북미 고위급회담 새로운 접근법 취할 가능성"

청와대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경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8일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8일 뉴욕으로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부의 발표 보도자료를 거론하며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해줬으면 한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기 위해 논의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겠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對) 이란제재 복원에서 한국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뉴스

www.fplove.or.kr

추! 전주매일 창간

315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0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6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소득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